

#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확대 :

## 코펜하겐 학파, 안보문제화, 그리고 국제정치이론

민병원(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들어가는 말 /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확대  
코펜하겐 학파와 국제정치이론 / 맺는 말

\* \* \*

탈냉전시대의 안보담론은 안보개념의 복합적인 확대를 주장하는 코펜하겐 학파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안보대상의 다양화와 안보영역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여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안보문제화(securitization)가 의미하는 바를 국제정치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위협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회적 구성을 통한 안보담론의 형성이 확대된 안보개념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이 부각된다. 이와 함께 확대된 안보개념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론적 전제와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가치판단과 관련된 규범론, 실증주의와 인식론, 그리고 네트워크화의 추세에 관련된 존재론 및 그것이 새롭게 던져주고 있는 신(新)안보 딜레마와 위협사회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코펜하겐 학파의 확대된 안보담론이 탈냉전시대의 국제정치이론에서 차지하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안보개념의 확대, 코펜하겐 학파, 탈냉전, 안보문제화, 국제정치이론

## 1. 들어가는 말

안보문제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이었다. 냉전시대의 전략연구는 핵무기와 초강대국의 갈등을 기반으로 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이것은 국제정치이론의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sup>1)</sup> 하지만 냉전시대의 전략 및 안보논리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동구권의 몰락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오랫동안 서구의 안보논의에 있어 핵심 기능을 담당해 왔던 ‘문제’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sup>2)</sup> 국제정치이론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안보이론과 개념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1990년대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추세는 안보연구의 입지를 재설정해야 하는 정체성의 과제까지 안겨주게 되었다.

냉전의 사고방식이 국가의 외교정책을 좌지우지하던 1950년대에 아놀드 울퍼스(Arnold Wolfers)는 ‘국가이익’의 관념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현실주의 안보개념이 대단히 모호하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안보’를 논하기 위해서 그 ‘수준(degree)’과 상황에 맞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위협적 권력(coercive power)’에 대한 집착을 넘어 중재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량도 갖추어야만 효율적이고 도덕적인 안보정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이익의 관념이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수단도 아닐 뿐더러, 국가이익은 곧 국가안보라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는 결코 안보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sup>3)</sup> 반세기 전의 이러한 지적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경직된 시각과 편협한 이론만으로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계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해내기란 불가능한데, 하물며 안보문제와 같이 민감한 분야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냉전시대의 전략연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선택해야만 하는 대안에 관한 연구였으며, 따라서 합리성과 합목적성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웠다.<sup>4)</sup> 하지만 지난 10-20여 년간 누적되어 온 세계정치의 격변현상은 안보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이론틀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퍼즐과 난해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펜하겐 학파로 일컬어지는 일단의 학자들이 이러한 안보문제의 변화를 어떻게 이론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이 제시해 온 이론적 핵심 주제인 ‘안보개념의 확대’와 ‘안보문제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체계적 이론화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안보개념의 확대와 안보문제화의 이슈가 기존의 국제정치이론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연구가 규범론과 인식론, 그리고 존재론에 걸쳐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확대

### 1) 탈냉전과 코펜하겐 학파의 등장

냉전시대의 안보연구는 대부분 군사적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대상도 주로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다. 국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이용한 전략적 접근방식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여타의 방법들은 전략적 목표에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도덕이나 복지, 비폭력 저항 등 군사영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여러 이슈들은 단지 2차적인 것으로 간주될 따름이었다. 냉전기 전략연구에 있어서 핵심 개념들, 예를 들어 억지(deterrence), 제한전(limited war), 군비통제(arms control) 등과 같은 개념들은 초강대국 중심의 양극화 체제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철저히 반영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개념들이 곧 국가와 인류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서 간주되고 있었다.<sup>5)</sup> 하지만 시대적 상황이 서서히 바뀌면서 이와 같은 어젠다의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과 의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아가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새로운 안보 논의들은 냉전시대의 좁은 안보개념을 탈피하여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안보개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도달하게 된다.

군사영역을 중시하는 과거의 전략연구에서 제기되었던 하나의 문제점은 특정한 군사계획이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체계적인 개념적·이론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군사

전략은 전장에서 회자되는 몇 마디의 경구로만 요약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서, 수많은 인적·물적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개념적 프레임 워크가 먼저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p>6)</sup> 이러한 점에서 군사전략 자체도 사회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넓은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냉전시대 초기부터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다. 미시경제학적 분석이나 복잡한 수리 모델링과 같은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더욱 체계적인 전략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합의로 자리잡아 온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연구의 부흥은 초강대국의 대결과 핵무기 대결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학적 접근방식을 지향하려는 노력이 맺은 당연한 결과였다.

냉전시대의 전략연구에서는 국가 정책결정자들의 세계관을 합리성과 효용성이라는 관점에서 단순화된 형태로 이해하려 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군사적 대결을 포함하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모두 이익과 비용의 계산, 그리고 최적의 대안이라는 합리적 선택의 패러다임 내에서 설명되곤 했다.<sup>7)</sup> 하지만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과거의 전략연구를 지탱해 오던 여러 전제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양극화 구도가 경제적 차원에서 다극화,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 단극화로 바뀌면서 구조적인 요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이데올로기 갈등의 완화로 연결되면서 과거와 같은 군사대립보다는 경제 등 하위정치 영역이 세계정치의 전면으로 떠오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적 상호 의존과 그로 인한 국가들 사이의 민감성 및 취약성의 증가는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중

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지역 안보공동체의 구도 역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편성되면서 국제사회 내에서 안보와 관련된 목소리와 역할이 증가하게 되었다.<sup>8)</sup>

1970년대 이후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이 증가하면서 안보 관념에 경제적인 이슈들이 포함되기 시작했지만, 초국가적인 환경 및 자원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이 또한 안보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인류가 처한 한계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정치적·제도적 장애요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대규모의 변혁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이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울러 요구되었다.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강제 수단과 유인책을 함께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절실하게 필요해진 것이다.<sup>9)</sup> 탈냉전시대의 안보 관념 확대는 이와 같이 정치적 거버넌스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전통적인 적과 대항해야만 하는 '안보 딜레마'를 넘어 어떻게 하면 적과의 공존을 모색하고 시스템 전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과거의 단순한 경쟁구도에서 협력과 조정의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복잡한 경쟁구도로의 전환이 새로운 안보담론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sup>10)</sup>

1985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설립된 분쟁 및 평화연구소(COPRI)를 중심으로 안보연구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일련의 학자들은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안보이론을 제창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일컬어 '코펜하겐 학파'라고 부른다.<sup>11)</sup> 코펜하겐 학

파는 국가행위자를 중심으로 하여 군사적 측면에만 치중하던 좁은 의미의 안보 어젠다를 벗어나 탈냉전시대에 부합하는 보다 포괄적인 안보개념을 구축하려 했는데, 이는 유럽의 안보 다이내믹스라는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초강대국 간 대결의 틈바구니에서 시달려 왔던 유럽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안보관념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1970년대부터 데탕트의 추세와 더불어 가속화되기 시작한 평화운동과 독일에서의 동방정책, 그리고 유럽 국내정치의 사회안보(societal security) 등이 새로운 안보관념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다.<sup>12)</sup>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이론은 초강대국이나 개별 국가들의 입장보다는 유럽 전체의 공동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집단안보의 담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 2) 안보대상의 다양화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담론은 한마디로 ‘안보개념의 확대’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이 학파의 선구자인 배리 부잔(Barry Buzan)은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안보이론에서 전통적인 안보관념과 대비되는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안보대상(referent objects)의 다양화이고, 두 번째는 안보영역(sectors)의 확대이다. 안보대상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국가가 안보의 유일한 대상으로 간주된 반면, 이제는 국가의 하부단위체나 초국가적 단위체를 모두 포괄하는 다양한 대상들이 안보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

련하여 그동안 국가가 내부 구성원들에게 수행해 왔던 기능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국가가 안보의 공급자라는 인식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가 개인이나 사회집단에 대해 오히려 위협을 가하는 역기능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은 제3세계권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안보와 관련한 국가의 이상적인 역할모형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잔은 국가의 기능을 대외적 기능과 대내적 기능으로 분리하여 오늘날의 '위협'이 어떤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군사력 또는 경제력과 같은 정성권력이 강한지 또는 약한지에 따라 국가의 유형을 분류할 수도 있지만, 부잔은 이러한 전통적 분류가 대내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회정치적 응집력'이라는 기준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sup>13)</sup> 여기에서 후자의 기준이 취약한 국가는 제3세계권의 국가들처럼 내부로부터 '위협'이 만들어지게 되며, 이는 곧 냉전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안보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 부잔의 논리이다.<sup>14)</sup> 이와 같이 국가의 역할 변화와 대내적 위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강대국 중심의 군사적 대결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과거의 전략적 패러다임이 오늘날의 맥락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15)</sup>

원래 '안보'란 개인의 상태를 지칭할 때 쓰이는 말이다. 로마 시대에 사용되던 '안보(securitas)'라는 용어는 인간의 내적 평화를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안정적이고 고요한, 그리고 자유로우면서도 걱정이 없는 행복한 모습을 의미했다. 이러한 개인 중심의 안보관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시대를 거쳐 프랑스 혁명 때까지 이어졌지만,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계몽주의가 확산되면서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이에 개입되기 시작하였다. 즉 당시까지만 해도 안보의 대상은 여전히 개인으로 국한되었지만,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은 공동체 내에서 사회계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정치사상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안보는 더 이상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공공재’로서 인식되었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개인의 안보가 집단의 안보를 위해 희생되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19세기의 유럽에서는 사회적·정치적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현상이 동시에 전개되었는데, 이는 안보관념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인주의와 국제주의라는 양대 사조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sup>16)</sup>

하지만 전체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20세기 초반, 그리고 복지국가 및 사회주의, 동원체제를 지향하는 제3세계권의 권위주의 체제가 발흥하던 20세기 중반의 역사를 거치면서 세계는 바야흐로 집단 안보의 물결 속에 휩쓸리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핵무기와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화의 구조는 안보의 대상을 철저하게 국가 중심으로 묶어놓았고, 그 안보문제의 적용도 전적으로 군사영역으로 한정짓고 있었다. 바야흐로 20세기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국가의 관할권 안에 ‘갇힌 상태(caging)’로 보호받는 ‘안보국가(security state)’의 시대였다.<sup>17)</sup>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 개인주의와 국제주의의 모습으로 전개된 안보관념이 20세기에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응집된 형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궤적을 고려한다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안보대상의 다양화

는 부분적으로 ‘과거로의 회귀’라고도 볼 수 있다. 안보의 대상이 국가 중심의 시각에서 다시 개인과 같은 국가 하부단위체와 초국가 차원으로 동시에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대상의 다양화는 개인, 국가, 글로벌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분석수준을 포함하기도 한다. 부잔은 특히 국가들 사이의 지역적 안보협력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동안 국가와 세계정치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역’이라는 새로운 단위체가 안보와 관련하여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코펜하겐 학파에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 역사적 친밀감(amity)과 적대감(enmity)으로 인하여 안보관계에 특수한 패턴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잔은 이러한 패턴을 일컬어 ‘안보 콤플렉스(security complex)’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 역사적 감정들이 혼합되고 권력이 불균등하게 분포됨으로써 나타나는 안보관계의 구조적 무정부상태를 총체적으로 일컫는다. 특정한 안보 콤플렉스 내에서는 군비경쟁, 무역분쟁과 같은 작용-반작용의 메커니즘들이 동시에 작동하며, 내부적으로 독특한 상호작용의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남미, 중동, 남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과 같은 지역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안보 콤플렉스라고 규정할 수 있다.<sup>18)</sup>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개념 확대는 이처럼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아래’와 ‘위’, 그리고 ‘옆’의 모습까지 담아내려 했다는 점에서 냉전시대의 안보관념으로부터 한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19)</sup>

코펜하겐 학파의 문제의식이 원래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안보 콤플렉스에 대한 논의는

국제관계 및 안보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세기에 들어와 이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했고, 또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초강대국 주도 하에 냉전의 갈등을 첨예하게 겪었던 유럽으로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상황에 더욱 적합한 안보 시스템을 구상하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곧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초강대국의 안보구상과는 별도로 지역상황을 고려한 안보 시스템, 즉 지역안보 콤플렉스에 대한 필요성을 의미한다. 냉전시대에는 유럽의 지역안보 공동체라는 관념이 초강대국 사이의 갈등 속에 오랫동안 묻힌 채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럽인들의 안보관념이 ‘유럽화(Europeanization)’ 되면서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이론도 유럽 내에서, 그리고 강대국 중심의 이론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sup>20)</sup>

### 3) 안보영역의 확대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개념 확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안보관념이 적용되는 영역(sectors)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군사영역, 특히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린 분야에서만 안보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탈냉전시대에는 이러한 영역이 대단히 넓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개념도 이에 맞추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잔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글로벌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호 의존 추세의 강화로 인해 정책과 사회적 선택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가장 우

선시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인 위협 대신에 국내사회적 위협요인들이 부각되면서 ‘취약성(vulnerabilities)’을 감소시키는 것이 안보의 주된 목표가 되었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또한 냉전시대의 전략적 안보관념이 보다 복합적인 국제관계이론으로 통합되면서 안보에 대한 연구가 학제적으로 확산된 것도 광의의 안보개념이 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sup>21)</sup>

부잔은 1991년의 저서와 논문에서 안보영역을 군사영역 및 정치·경제·사회·환경의 비군사영역으로 나누고 있다.<sup>22)</sup> 이와 같은 5개의 핵심 영역들은 안보개념의 근본적인 바탕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서 ‘근본적’이라 함은 안보의식을 유발하는 ‘위협’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원천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리차드 울만(Richard Ullman)이 비판한 바와 같이 군사적 측면에서의 위협에만 초점을 맞추는 안보정책은 지극히 편협한 것이며, 오늘날에는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책대안의 범위를 좁히는’ 모든 것들이 위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sup>23)</sup> 위협이 핵심 ‘가치(values)’, 즉 보호해야만 하는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잠재적인 상실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러한 가치의 원천이 되는 다양한 영역들을 세분화하는 것은 탈냉전시대의 변화를 감안할 때 당연한 일이다. 전통적 안보개념이 ‘생존’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했다면, 그 이외에 다양한 가치의 원천이 되는 경제, 사회, 정치, 환경 등 비군사영역에서 야기되는 간접적 위협도 안보논의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코펜하겐 학파의 주장이다.

부잔을 주축으로 하는 코펜하겐 학파에서 이와 같이 안보의 영

역을 확대하게 된 것은 이론적·추상적 동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유럽의 안보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유럽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위협'의 관념을 이론화하였고, 이것이 바로 5가지의 영역, 즉 군사영역과 더불어 제시된 4가지의 비군사영역인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었다. 이와 같은 비군사영역은 단순한 안보요소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역사 속에 '내재된(embedded)' 경험의 산물이었던 것이다.<sup>24)</sup> 하지만 다양한 비군사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코펜하겐 학파는 안보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과거의 평화연구 전통과 분명한 대비를 보인다. 모든 것이 안보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급진적 평화연구의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으면서 전략연구의 좁은 안보관념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다는 점은 코펜하겐 학파 안보담론의 커다란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하지만 부잔의 초기 저술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채 모호하게 언급되고 있었다. 그는 군사영역과 비군사영역을 구분하면서 이들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정치적 속성'이 각 영역 고유의 기능적 속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기술이나 군사력 자체보다는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념은 안보가 적용되는 각 영역 자체를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안보논의가 전개되는 정치적 과정을 동시에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안보영역의 확대 속에 한꺼번에 포함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sup>26)</sup> 하지만 이후의 저작에서는 5가지 영역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위협을 만들어내는 카테고리로서 안보영역을 이해

하게 된다. 즉 코펜하겐 학파에서 강조하는 안보영역의 확대는 단순히 위협의 원천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이 유럽과 같이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어떻게 위협을 생성해내는 다이내믹스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주요 카테고리로서 다루어지고 있다.<sup>27)</sup>

안보영역의 확대가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이론에서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특히 안보개념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데이비드 볼드윈(David Baldwin)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볼드윈은 안보개념이 기본적으로 '가치에 대한 위협'에서 기인한다는 코펜하겐 학파의 입장이 이미 오래 전에 아놀드 울퍼스(Arnold Wolfers)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고 주장한다.<sup>28)</sup> 문제는 '가치'와 '위협'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그는 코펜하겐 학파가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코펜하겐 학파의 이론에서는 안보개념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얼마만큼의 안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인지 등에 관한 질문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어떤 위협을 다스리고자 하며, 어떤 수단에 의해, 그리고 어떤 자원을 희생하여 안보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안보개념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볼드윈의 주장이다.<sup>29)</sup>

볼드윈이 지적한 사항들은 안보영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코펜하겐 학파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사영역과 비군사영역 사이의 관계를 체계화하는 데 볼드윈의 비판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그는 군

사영역이 비군사영역에 비해 어느 정도로 중시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던지면서 ‘한계가치(marginal value)’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군사영역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들이 복수로 존재한다고 보고 그러한 가치들에 대한 욕구를 최소한으로 만족시키는 선에서 안보의 기능을 설정한다. 즉 필요 이상으로 안보를 우선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군사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sup>30)</sup> 어떤 가치에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가치들을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낼 필요가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앞으로 코펜하겐 학파의 확대된 안보개념이 더욱 세련된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 4) 안보문제화와 화행(話行)이론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개념이 이와 같이 안보대상의 다양화와 안보영역의 확대라는 두 가지의 측면을 집중 부각시켰다는 점은 이 학파가 여전히 주류 안보담론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출발점은 국가 중심의 군사적 안보개념이라는 현실주의적 입장이었는데, 그것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탈냉전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려 했다는 것이 코펜하겐 학파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이론은 현실주의의 색채를 벗어나 상호 주관성과 성찰을 중시하는 구성주의 방향으로 전환하였

다. 이때부터 이 학파는 안보를 단지 객관적 또는 주관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단순한 틀에서 벗어나 안보행위의 ‘화행(speech-act)’적 속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안보를 하나의 화행 또는 언행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이슈이건 간에 그것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또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킬 경우 그 행위 자체가 곧 ‘안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안보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객관적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논하는 사람들이 위협을 인식하고 그 위기적 속성을 이슈화하는 사회적 행위를 일컫는다. 이처럼 코펜하겐 학파는 안보행위가 그 자체로서 ‘자기 준거적(self-referential)’ 속성을 지닌다는 구성주의적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다.<sup>31)</sup>

코펜하겐 학파가 안보행위를 하나의 화행으로 이론화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위버(Waever)의 ‘안보문제화(securitization)’ 개념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안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보다 그에 대한 담론의 형성과정을 통해 생겨난다. 즉 현존하는 위협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안보담론을 통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보의 주체와 객체가 하나의 개념 안에 동시에 포함되는데, 안보주체는 현존하는 위협의 대상, 즉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안보의 ‘대상(referent object)’이 무엇인지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게 된다. 안보의 객체가 주체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 개념 속에는 대상과 주체가 결정되는 동적 메커니즘이 담겨 있는 것이다. 코펜하겐 학파의 확대된 안보개념에서는 이처럼 안보대상과 안보영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과정, 즉 안보담론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안보문제화의 개념과 관련하여 코펜하겐 학파는 우선 ‘위협’에 대한 인식 또는 ‘위기’의 설정과정이 단순한 객관적 또는 주관적 차원을 넘어 행위주체들 사이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이라고 이해한다.<sup>32)</sup> ‘구성(construction)’이라는 관념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sup>33)</sup> 안보문제화는 또한 생존과 관련된 ‘수사적(rhetorical)’ 구조를 지닌다. 수사적 구조를 지닌 안보담론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드라마처럼 부각되고 그림으로써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하나의 ‘안보’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사회 전체에 걸쳐 예외적이고 집중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sup>34)</sup> 이와 같이 안보문제화의 과정은 ‘생존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는 과정과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비상행동’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안보문제화의 개념은 사회적 담론 형성의 과정을 지칭하는 동적 개념으로서 안보행위를 하나의 ‘화행’으로 이문화하는 데 가장 핵심 개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원래 화행이론은 언어학에서 유래하였다. 예전에는 언어의 사실묘사 기능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화행이론에서는 언어가 곧 ‘행위’가 된다는 점을 중시한다. 다시 말해 언어는 단지 ‘말(speech)’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합쳐진 하나의 ‘화행(speech-act)’이라고 보는 것이다. 존 오스틴(John Austin)과 그의 제자인 존 셸(John Searle)에 의해 체계화된 화행이론은 언어의 문장이 단순하게 특정한 대상을 묘사하는 서술문(constatives)의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서 어떤 행위의 일부나 전부가 되는 수행문(performatives)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언어가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경우, 그것은 3가

지 세부적인 단계를 포함한다. 첫 번째는 ‘발화행위(locutionary act)’로서, 주어진 의미와 대상을 포함하는 표현을 일컫는다. 두 번째는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로서, 무언가를 말함으로써 곧 그것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로서, 말을 듣는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발화효과행위는 특정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sup>35)</sup>

화행이론의 핵심적 요소를 도입하여 안보문제화의 개념을 수립한 코펜하겐 학파에서는 “어떤 문제를 안보문제로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문제 그 자체이다”는 답을 제시한다. 다만 하나의 문제가 이처럼 안보문제화되는 과정은 정치적인 담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즉 담론이 있기 이전에는 안보문제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위버가 제시하고 있는 ‘화행’의 관념은 바로 이러한 담론과정이 바로 안보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잘 보여준다. 안보가 ‘화행’이라 함은 결국 ‘안보’라는 언급 자체가 하나의 발화행위임을 의미한다. 말을 하게 됨으로써 곧 실행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화행은 그 자체로서 자기 준거적 속성을 지닌 발화수반행위이기도 한데, 이는 실행 가능성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안보’라는 언급을 통해 ‘안보행위’가 구성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안보담론을 이끌어 가는 안보주체와 안보대상 사이에 상호 주관적 관계가 형성되며, 이를 통하여 안보문제가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sup>36)</sup>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문제화 개념이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구성주의에서도 원래 ‘언어’의 역할을 중요하게 간주해 왔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안보의식은 사회적 동원(mobilization)의 결과인데,

그 과정에서 언어는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sup>37)</sup> 예를 들어 사회안보를 위협하는 이민자 문제, 테러, 이슬람 원리주의, 마약 등과 같은 별개의 사안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안보담론을 만들어내는 경우에 언어의 역할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구성주의에서는 언어가 담론의 형성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큰 관심을 갖는다.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것이 실제로 행동을 동반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공통적인 속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선 언어는 단순하게 현실을 '대표'하는 차원을 넘어 '수행적(performative)' 속성을 함께 지닌다. 안보담론은 그것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동원과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언어는 그것이 담론을 통해 표출되는 과정에서 몇 단계를 거치게 된다. 안보담론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우선 특수한 상황에서 안보지식과 관념이 거론되기 시작하며, 그런 후에 여타 분야와는 차별화된 독자적 '안보영역(security field)'이 만들어진다. 여기에서는 무엇이 안보관행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규칙과 개념화·제도화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안보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들을 통합하는 '안보형성(security formation)'의 과정이 진행되는 데, 다른 분야들과의 연계성과 구성적(constitutive) 관계가 강조된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여타의 분야들은 안보영역에 종속되며, 안보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지위로 전락하게 된다. 모든 것은 안보논리를 중심으로 통합되고 재구성·재해석되는 것이다.<sup>38)</sup>

이처럼 안보문제화의 개념은 탈냉전시대의 복합적 '위협'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정치인이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사회 안에서 선택되고 규정된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안보를 새로운

각도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sup>39)</sup> 동시에 화행이론을 동원한 안보문제화의 개념은 안보개념이 ‘정치적’ 속성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다. 어떤 비정치적 이슈에 대해 정부나 정치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 등의 자원이 배분되기 마련이다. 부잔은 이러한 과정을 ‘정치문제화(politicization)’라고 부르고 있는데, ‘안보문제화’의 과정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형태로서, 해당 이슈가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면서 정상적인 정치상황을 벗어난 비상상태와 긴급조치가 요구되는 절차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안보문제화는 주어진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조치들을 정당화시키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sup>40)</sup>

안보문제화와 화행의 과정이 ‘정치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곧 코펜하겐 학파의 확대된 안보개념이 개인 차원에서의 생존이 아닌 집단의 존속을 근본적인 문제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sup>41)</sup> 집단 전체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들은 사회정치적 과정을 통해 공론화되고, 이것이 위기로 인식되면 정상적인 상황을 중단시키고 비상시국으로 돌입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sup>42)</sup> 그럼으로써 코펜하겐 학파는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안보개념이 기본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전 영역에서 사회적 담론과정을 통해 다양한 위협이 부각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잘 묘사하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안보는 이와 같이 안보대상과 안보영역의 다변화, 복잡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사회·국가·글로벌 차원에서 생존과 여타의 중요한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코펜하겐 학파의 확대된 안보개

념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최초로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안보담론의 화두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3. 코펜하겐 학파와 국제정치이론

#### 1) 이론과 실천 : 가치와 규범의 문제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문제화 개념은 ‘정치적’ 속성을 강조하면서 실존적인 위협을 판별하는 데 있어 현실주의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이클 윌리엄즈(Michael Williams)는 코펜하겐 학파에서 강조하고 있는 몇몇 구성주의적 요소들이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정치철학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슈미트에게 있어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이란 친구와 적을 구분짓는 ‘관계’의 측면을 지니는데, 이는 코펜하겐 학파에서 말하는 ‘실존주의적 위협’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피아가 구분됨으로써 위협의 원천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슈미트에게 있어서 ‘주권(sovereignty)’이란 무엇이 위협이고 무엇이 위기인지를 판별하는 권한, 즉 ‘예외(exception)’를 가늠짓는 ‘결정(decision)’이라고 본다. 정상상태를 벗어난 극단적 위기상황에서는 어떠한 규범보다도 주권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는 바로 이러한 기능과 권한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문제화’ 관념

역시 주어진 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예외적 위기상황을 선언함으로써 정치적 현실주의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sup>43)</sup>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코펜하겐 학파의 기본 입장은 주류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력과 국가 중심의 시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확대된 안보개념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코펜하겐 학파의 입장이 현실주의 이론과 같이 합리주의적·객관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확대된 안보개념은 과연 중립적인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주의의 연원을 이루는 비판이론의 국제정치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유럽의 평화 연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비판이론에서는 국가와 군사영역 중심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그로부터 안보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밝혀내고 해체(deconstruct)함으로써 현실의 이면에 숨겨진 모습을 바꾸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비판이론의 안보이론 역시 '정치적'인 속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해체하여 도덕적으로 더 나은 대안으로 대체하려 하기 때문이다.<sup>44)</sup> 비판이론의 안보이론은 항상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즉 가치가 개입된 실천이론인 것이다.

비판이론과 구성주의 이론은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구성'의 메커니즘으로 안보를 설명하고 있지만 가치와 연관하여 양자의 성향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비판이론의 경우 안보를 사회적 구성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변화를 모색하며 기존의 정상적인 사회현상을 중단시키고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자 한다.<sup>45)</sup> 하지만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개념은 사회적으로 구

성된 구조를 안정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이며 비판과 이해를 통하여 그러한 사회구조를 유지·관리하고자 한다.<sup>46)</sup> 이러한 점에 있어서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이론은 비판이론보다 현실주의 안보이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비판이론과 같이 권력의 비정상적 지배권에 저항하기보다는 슈미트가 관찰한 대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정치적 속성이 확대된 안보개념 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의 뿌리는 비판이론에 두고 있지만 구성주의 이론이 상당한 정도로 주류의 국제정치이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코펜하겐 학파의 이러한 성향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일부 학자들의 경우에는 코펜하겐 학파의 구성주의적 시각이 비판이론과 달리 중립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오히려 서구 중심의 편향성이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이론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잔의 초기 안보논의는 세계가 '미숙한(im-mature) 무정부상태'로부터 '성숙한(mature) 무정부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날의 상황은 그 중간에 놓여 있다는 진화론적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다.<sup>47)</sup> 특히 지역별로 이러한 성숙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서구의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편견이 이론적 논의 속에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는 코펜하겐 학파의 접근방식이 비판이론의 공공연한 편향성과 실천주의적 입장에서부터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구 중심의 근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확대된 안보개념에 대한 논의 자체가 초강대국에 의해 시달려 온 유럽의 경험을 기반으로 출발했고 또 전통적 안보개념을 벗어난 신기원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안에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서구 모델에 대한 우

월감은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새롭게 안보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는 여타의 지역에 대한 적실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관이 ‘안보문제화’라고 하는 구성주의적 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호이스만은 이러한 안보개념의 문제점을 ‘규범적 딜레마(normative dilemma)’로 부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안보담론은 위협을 만들어내는 모든 사회적 이슈들을 언급하는 행위만으로 선입견이나 사전 판단을 공론화시키는데, 이에 대한 검증이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론화 과정 자체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민자문제와 마약문제를 연계시켜 안보 이슈로 삼을 경우 그것의 최종적인 결론과는 상관없이 안보담론 자체는 이미 이민자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만다.<sup>48)</sup> 안보담론을 이끌어 가는 주체들은 이와 같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행위 자체로부터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약은 자신들이 안보담론을 통하여 비판하거나 벗어나고자 했던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선입견에 의해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만큼 안보담론 과정 자체가 다양한 주관적 가치들을 반영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코펜하겐 학파의 포괄적 안보개념이 현실주의와 같이 중립적인 형태로 수립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코펜하겐 학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이론화한 ‘안보문제화’의 개념이 이러한 ‘규범적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구성주의자들조차 이러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론 내부에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



한다고 본다.<sup>49)</sup> 호이스만에 따르면 이것은 안보위협을 물신화하려는 성향, 즉 규범적 딜레마가 일어나는 정치적 상황을 먼저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 안보담론의 과정 속에서 무엇이 위협이고 누가 적인가에 대한 개념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정치적 힘의 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안보영역’의 창출과 사회적 동원, 그리고 정치적 쟁점화라는 일련의 과정들은 그 이면에 힘의 역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이건 가장 강력한 힘, 즉 헤게모니의 담론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므로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힘과 지식의 연계성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호이스만이 말하는 안보의 ‘탈(脫)자연화(denaturalization)’ 방법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일컫는다. 어떤 과정을 통해 헤게모니의 담론이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이외의 담론들이 이러한 지배관계 속으로 편입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자들의 임무라고 여기는 것이다.<sup>50)</sup>

이러한 잠재적 문제는 부잔의 초기 저작 속에서도 분명하게 인지되고 있는데, 그는 안보개념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경합적 해석이 공존하는 개념(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 이하 ECC)’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51)</sup> 이러한 규정을 통해 부잔은 안보개념이 포함해야 할 복잡성과 확장성으로 인한 논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즉 안보의 개념을 자신들이 의도했던 대로 확대할 경우 부득이하게 그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호 모순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개념의 설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을 미리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개념규정이 지극히 모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데이비드 볼드윈은 안보관념이 ECC의 기본 요건들을 제대로 충족시

키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ECC로 분류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sup>52)</sup> 특히 ECC가 기본적으로 가치에 대한 ‘평가적(appraisive)’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국가마다 서로 다른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생겨날 수밖에 없는 안보개념의 차이를 과연 제대로 비교·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코펜하겐 학파의 확대된 안보개념이 ECC로 규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이렇듯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 및 안보문제화 개념은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강조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상대주의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안보문제화의 관행이 권력에 의해 남용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코펜하겐 학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주의깊게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소련이나 이란, 북한의 경우 군사영역을 넘어서는 사회의 모든 이슈들을 안보문제화함으로써 국내사회적 왜곡과 대외적 긴장을 초래했다는 점은 이미 부잔에 의해 언급된 바 있다.<sup>53)</sup> 상호 의존과 네트워크화의 추세로 인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안보문제화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부작용의 문제는 결국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론이 무리하게 중립적인 지위를 외치기보다 그러한 이론을 낳은 상황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가치판단’이 결국 이론의 의미를 모색하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확대된 안보 및 안보문제화의 개념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sup>54)</sup>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연구는 국제정치이론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 평화연구

와 전략연구의 중간 입장에 가깝다. 평화연구가 글로벌 차원의 유토피아에 대한 칸트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면, 전략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된 홉스의 전통을 따른다. 또한 평화연구가 19세기 이후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면, 전략연구는 냉전시기의 미국에서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양대 학풍의 전통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이론은 제도를 중시하는 그로티우스의 전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안보이론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려는 노력이 어느 한쪽의 시각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해주기도 한다.<sup>55)</sup> 확대된 안보개념은 유럽의 경험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탈냉전시대에 의미 있는 안보담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 2) 인식과 방법 : 실증주의를 넘어서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이론은 초기에 ‘국가’를 중시하면서 ‘객관주의’의 입장을 택했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에 근접해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안보문제화’의 개념이 부각되면서 다분하게 구성주의의 성향으로 치우치게 된다.<sup>56)</sup>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아직도 코펜하겐 학파의 기본 입장이 국제정치이론의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의 혼합적 또는 중간적 모습에 가까운 것으로 비쳐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인식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이론은 여전히 현실주의에 훨씬 더 근접해 있었다. 부잔의 초기 저작

만 하더라도 연구방법이나 인식론에 대한 코펜하겐 학파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국가’나 ‘안보영역’과 같은 핵심 개념들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실체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안보의 주체와 대상, 영역 등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대신 경험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코펜하겐 학파는 인식론에 있어서 전통적 실증주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이는 ‘안보문제화’의 개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안보이슈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까닭에 항상 가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안보문제화의 과정 속에 개입되는 제반 요소들을 고정된 상태로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인 국제정치이론과 안보이론에서는 국가와 안보의 여러 영역들을 ‘주어진(given)’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나 행위규범 역시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구성주의로 기울어진 최근의 안보이론에서는 이러한 속성보다도 상호주관적 형성과정을 더 중시하게 되면서 실증주의의 인식론과 거리를 두게 된 것이다. 나아가 안보문제화의 과정이 하나의 ‘화행’이라고 봄으로써 언어와 행동의 ‘과학적 측정(measurement)’이라는 방법론적 고민을 뒤로 한 채 지나치게 이론적 범위를 넓히는 데에만 치중했다는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코펜하겐 학파의 입장은 ‘관찰할 수 없는(unobservable)’ 개념 또는 ‘측정할 수 없는(unmeasurable)’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경험적 관찰에만 치중하는 기존의 합리주의적 전통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론에 기반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주관적인 방향으로 흐르

면서 여타 안보 패러다임과의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예를 들어 코펜하겐 학파의 ‘위협’ 개념은 주관적 인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구성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외부의 위협요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위협’이나 ‘안보’의 개념이 하나의 ‘화행’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실체보다는 국내정치의 엘리트들에 의해 조작되는 정치적 과정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안보문제의 국내정치적 속성이 더 중요한 것이라면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안보 딜레마’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결국 안보개념의 확대가 지나치게 주관적인 요소를 내포하게 되면서 안보의 핵심적인 속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sup>57)</sup>

안보연구는 사회적·정치적 현상과 역사를 ‘안보’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재해석함으로써 그 나름의 독특한 분석틀을 만들어왔다. 냉전시대에도 이러한 안보중심적 패러다임은 미국 외교정책이나 정치사를 연구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권력이나 위협, 핵심적 가치 등과 같은 주요한 이론적 관념들을 동원하여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독자적인 학풍을 형성할 정도였다.<sup>58)</sup> 또한 구성주의적 시각이 전통적인 현실주의에 비해 안보연구에서 발전적인 성과를 이루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구성주의 안보론은 현실주의에서 논의하는 대부분의 안보 이슈—예를 들어 세력균형이나 안보 딜레마—를 설명해낼 수 있을 뿐더러, 현실주의에서 다루기 힘든 현상들—민주평화 및 글로벌 군사화의 유사 패턴—을 보다 설득력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sup>59)</sup>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 안보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안보의 본질적인 요소를 상당히 상실해 버린 구성주의적 접근방식이 과연 오늘날의 국제정치이론과 안보연구에 인식론적으로 얼마만큼 보탬이 될 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한편,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이론은 안보의 궁극적인 대상으로서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는 환원주의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신현실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분석수준을 국가 하부단위체로 귀결시키기보다 초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행위자의 존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sup>60)</sup>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들어와 현실주의 이론가들이 국가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신념이나 인식, 규범과 같은 변수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성주의자들도 현실주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의 역할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와 현실주의는 어느 정도 수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up>61)</sup> 이러한 이론적 수렴의 추세는 근본적으로 현상과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사한 성향을 보이기 때문인데, 현실주의와 구성주의가 그만큼 인식론에 있어서 근접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구성주의도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처럼 증거를 바탕으로 반증작업을 수행하는 과학적 프로젝트의 하나라는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의 주장은 구성주의가 인식론에 있어 더 이상 주류 이론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sup>62)</sup> 또한 해석학적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비판이론과는 달리 구성주의 진영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경험적 검증작업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sup>63)</sup>

인식론과 관련하여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이론이 다루어야 할

향후 어젠다의 하나로서 최근 들어와 활성화되고 있는 비디오 매체의 증가현상을 들 수 있다. 위버의 ‘안보문제화’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개념의 확대는 안보의 핵심요소를 ‘화행’에서 찾고 있지만 복합적 커뮤니케이션의 앞부분, 즉 ‘화(speech)’의 요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아직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구성주의 안보담론의 과정에서 언어적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에 따른 비디오 매체들은 콘텐츠보다 더 영향력이 강한 ‘이미지’를 전파하는 데 기여해 왔다. 과거의 ‘화(話)’가 담론 형성과정에서 여론을 응집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담당했다면, 오늘날의 ‘이미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복제·전파되면서도 심층적인 커뮤니케이션에는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는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비주얼 미디어의 여러 측면들이 과연 구성주의적 ‘안보문제화’의 성격 규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분명 코펜하겐 학파의 중요한 연구 어젠다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sup>64)</sup>

또한 코펜하겐 학파에서는 확대된 안보개념을 제시하면서 안보문제화의 과정이 항상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데, 이는 안보담론의 형성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략적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말해준다. 티에리 발자크(Thierry Balzacq)는 안보담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이슈가 항상 안보문제로 격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전략적 관계, 특히 청중이나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권력투쟁의 모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5)</sup> 안보담론의 형성과정은 단순한 ‘화행’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더 복잡한 전략적 상호작용과 권력관계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이론이 실증주의적 현실주의로부터 시작하여 상호 주관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접근방법을 실험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양 극단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채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보다 많은 구성주의 학자들이 안보연구에 동참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존재와 네트워크 구조 : 신(新)안보 딜레마와 위험사회

코펜하겐 학파의 확대된 안보개념은 다양한 국제정치의 행위자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특히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또는 국가 차원에서의 위협이나 안보관념을 중시하는 코펜하겐 학파의 입장은 최근에 들어와 개인과 국제사회를 포함하는 더욱 확대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안보대상과 안보주체의 다양화를 인정하면서도 확대된 안보개념은 여전히 ‘국가’를 그 중심에 배치하고 있다. 부잔이 제시한 ‘모래시계(hourglass)’ 모형은 바로 초국가 수준과 국가 하부단위체 수준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모래시계의 허리 역할을 바로 국가가 담당한다고 본다.<sup>66)</sup> 비록 국가가 안보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변화하는 안보개념 속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역할은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코펜하겐 학파의 입장이다.<sup>67)</sup>



하지만 코펜하겐 학파의 존재론적 관심 중에서 아직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세계라는 ‘판’이 점점 네트워크화되어 가는 추세와 그것이 안보문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다. 과거의 국제정치가 영토 국가 또는 근대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당구공 모델로 설명되었다면, 오늘날의 세계정치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초국가행위자 및 국가 하부단위체들 사이의 복잡한 연계성을 특징으로 한다. 세계화의 추세로 인하여 기존 국가들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국가의 통제력과 권한, 심지어 정체성의 상징으로서의 기능마저도 대폭 축소되어 왔다. 대신에 다양한 단위체들 사이의 이합집산 현상들은 더욱 심해져 이제 이들 사이의 연결망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세계정치의 모습을 그려보기 어렵게 되었다. 세계정치 구조를 네트워크로 이해해야 할 당위성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네트워크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론의 차원을 넘어 실제 세계정치의 ‘판’ 속으로 잠식해 들어오는 존재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확대된 안보개념은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모습까지도 담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sup>68)</sup>

기초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확대된 안보개념을 논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네트워크적 시각들이 엿보이고 있다. 맥스위니(McSweeney)와 같은 학자들은 안보정책이 개인들의 요구를 취합하여 국가 정책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안보이론은 사회질서에 대한 ‘성찰이론(reflexive theory)’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속의 행위자들이 서로 간에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상호 구성하는 동적 과정이 먼저 탐구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과거에는 단지 안보의 대상에 불과했던 개인이나 사회 집단들이 안보의 주체(agents)로서 다른 개인이나 사회집단의 안보요구를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에 동참하게 되었다.<sup>69)</sup> 또한 과거에는 국가에 고착되어 있던 개인의 정체성이 이제는 사회와 다른 개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보다 탄력적인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마틴 쇼(Martin Shaw)는 안보의 대상이 국가나 개인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 특히 사회집단이나 글로벌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유형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sup>70)</sup> 이러한 연구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구성주의적 안보관계를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초기의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sup>71)</sup>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이론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은 바로 세계정치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변화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이다. 코펜하겐 학파는 구성주의적 안보담론을 통해 안보문제에 대한 인식론적·방법론적 패러다임의 전환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21세기의 변화를 따라잡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안보이론은 국가 중심의 전통적 군사안보 개념을 확대시켜 보다 폭넓은 안보개념으로 발전시켰고 또 안보문제화가 일어나는 정치적 과정을 파헤치는 데 일조했지만, 적어도 안보문제 자체가 지닌 핵심적 속성과 확대된 대상 및 영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화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21세기에 들어와 9·11사태 및 연이은 테러로 인한 안보위협은 새로운 국면은 분명 코펜하겐 학파의 이론틀을 가지고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

히 세계정치의 상호 의존현상과 네트워크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안보와 연관된 민감성과 취약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안보개념의 확대만으로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네트워크화에 따른 새로운 안보 딜레마의 문제, 그리고 위협의 개념 변화 등이 앞으로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이론에서 체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세계의 글로벌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안보문제의 속성도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최근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신(新)안보 딜레마’이다. 냉전시대의 중앙집중형 메커니즘은 그 내부에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안보 딜레마’였다. 안보 딜레마는 주권국가들 사이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안보위협과 방어의 악순환 메커니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대세계의 한계를 잘 대변하는 핵심적인 모델이 되어왔다.<sup>72)</sup> 그러나 21세기의 복잡한 세계화 추세는 국가의 변화와 더불어 안보 딜레마의 속성도 변하게끔 만들었다. 필립 쉰니(Philip G. Cerny)는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의 안보 딜레마를 ‘전통적 안보 딜레마’로, 그리고 21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안보문제를 ‘신안보 딜레마’로 구분함으로써 네트워크화의 진행에 따른 안보문제의 새로운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신안보 딜레마는 바로 안보영역에 있어 분리재가 많아지면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을 일컫는다.<sup>73)</sup> 전통적 안보 딜레마가 비분리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집중형 거버넌스를 정당화시켜 왔다면, 탈냉전시대에는 분리재가 지배적인 재화의 유형이 되면서 제국주의나 개입정책과 같이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쉽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sup>74)</sup> 결과적으로 이러한 한계는 안보라는 비분리적 공공재의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이 항의(voice)나 충성(loyalty)과 같은 전통적 참여방식보다는 이탈(exit)의 대안을 선호하는 새로운 유형의 딜레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자발적인 형태의 해법도, 리바이어던과 같은 권력기관에 의한 해법도 오늘날의 안보 딜레마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시대에는 이탈의 대안이 훨씬 쉽게 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안보연구에 있어 새롭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어젠다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재로서의 글로벌 안보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이탈의 대안을 선택할 것이고, 결국 전체 시스템은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 허쉬만(Albert O. Hirschman)이 언급했던 시스템 쇠퇴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sup>75)</sup>

이처럼 신안보 딜레마를 안고 있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모습은 웨스트팔리아 체제를 낳았던 중세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중세시대에도 오늘날처럼 재화가 고도로 분리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의 관할권도 중복되거나 상호 침투적이었고, 불균형과 소외, 다중 정체성, 재산권 다툼 등과 같은 특징에 있어서 중세와 21세기는 여러 가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형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는 근대국가와 같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단위체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세계정치체제의 엔트로피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화와 네트워크화로 인한 국가의 '공동화(hollowing out)' 현상을 다국적·초국적·지역적 거버넌스 제도로 '보완(filling in)'하지 못하게 된

다면 바로 써니가 경고했던 신안보 딜레마는 21세기의 세계정치를 비관적인 시나리오 속에 빠뜨리고 말 것이다.<sup>76)</sup> 세계화와 네트워크 시대의 이러한 딜레마는 앞으로 코펜하겐 학파를 비롯한 여러 안보 이론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신안보 딜레마와 더불어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로써 ‘위험’의 수준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진단은 이미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Ulrich Beck)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그는 과거의 계급기반사회에서 산업 사회가 출현했고 오늘날 네트워크 시대에 들어와 이것이 다시 ‘위험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sup>77)</sup> 본 논문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은 ‘정치적 동원’이라는 맥락에서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문제화 개념보다 한발 더 나아간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코펜하겐 학파에서는 안보문제화의 개념을 통해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들이 ‘위험’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는 했지만 그 대상을 군사,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몇몇 핵심적인 영역으로 한정시켜 놓고 있었다. 그렇지만 위험사회론에서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위험’으로 간주된다고 보는 점에서 기존의 안보논의와는 질적으로 차별화된다.<sup>78)</sup> 즉 사회의 모든 영역이 그 자체로서 위험이라고 간주되는데, 이는 코펜하겐 학파에서 강조하는 ‘동원’ 또는 ‘사회적 구성’의 관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안보 개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다. 말하자면 안보의 논리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들은 코펜하겐 학파를 포함한 많은 안보연구자들에게 네트워크 시대의 존재론과 그에 따른 새로운 안보문제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 4. 맺는 말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할 때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이론은 냉전 시대의 편협한 안보개념을 확대·수정함으로써 국제정치이론과 안보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확대된 안보개념은 근대 이후 세계정치의 주된 행위자로 자리잡아 온 국가의 역할이 쇠퇴하고 군사적 영역의 위협이 줄어들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안보대상의 변화와 안보영역의 확대현상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온 코펜하겐 학파가 국제정치이론에 미친 기여도는 자못 크다. 현실주의의 기반 위에서 출발했지만 유럽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초강대국의 입장에 편향되어 있던 전통적 안보논리들을 넘어서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특히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 성과와는 별도로 동아시아 지역이나 여타의 제3세계 지역에서의 안보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확대된 안보개념은 특히 안보문제화라는 새로운 구성주의적 개념을 통해 국제정치이론의 거시적인 틀을 안보문제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적용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코펜하겐 학파에서는 화행이론 등과 같은 타학문분야의 이론을 동원하여 안보문제가 정치적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동적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설명해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제들은 주류의 실증주의

적 관점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것들이다. 아직까지는 경험적 연구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구성주의의 틀을 이용하여 안보문제를 다루고자 했다는 시도만으로도 코펜하겐 학파의 업적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인식론이나 존재론과 관련하여 현실주의 및 여타의 국제정치이론들과 보다 분명한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펜하겐 학파의 이론은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보완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우선 안보문제화 개념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편향성에 대한 취약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규범적 딜레마’라고 불리는 이러한 취약성은 안보를 논의하는 주체들의 선입견이나 가치가 안보담론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ECC로만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확대된 안보개념의 서구중심적 전제도 가치 개입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코펜하겐 학파는 화행이론을 원용한 탈실증주의적 안보문제화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큰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주류의 실증주의로 많이 선회하면서 인식론적 관점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선을 그을 것인지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코펜하겐 학파의 새로운 안보이론이 탈냉전시대의 확대된 안보개념을 제시하는 데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21세기에 나타나는 네트워크화 현상 및 그로 인한 새로운 존재론적 변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앞으로의 이론적 성과를 평

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볼드윈은 확대된 안보개념이 국제정치이론과 관련하여 진정으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는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안보의 다원적 측면이나 서로 다른 분석 수준에 대한 지적은 이미 반세기 전에 윌퍼스에 의해 충분히 제시된 마당에 코펜하겐 학파의 확대된 안보개념이 과연 새로운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sup>79)</sup> 이러한 엄밀한 지적은 일부 타당한 면이 있지만, 탈냉전시대의 안보담론을 이끌어 온 코펜하겐 학파에 대한 완전한 평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지난 반세기 이상 고착화되어 있던 안보연구의 틀을 뛰어넘어 세계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핵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황금기(Golden Age)’를,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르네상스기’를 누려왔던 안보연구는 이제 탈냉전기에 들어와 새로운 변모를 모색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확대된 안보개념이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서 미래의 안보담론을 이끌어갈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논문접수일 4월 9일, 심사완료일 6월 3일)





주

- 1- David A. Baldwin, "Security Studie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World Politics*, 48-1 (1996), pp. 123-124 ; Stephen M. Walt, "The Renaissance of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5 (1991), pp. 213-216.
- 2- Lawrence Freedman, "International Security : Changing Targets," *Foreign Policy*, pp. 49-52.
- 3- Arnold Wolfers, "'National Security' as an Ambiguous Symbol," *Political Science Quarterly*, 67-4 (1952), p. 502.
- 4- Joseph S. Nye, Jr. and Sean M. Lynn-Jones,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 A Report of a Conference on the State of the Field," *International Security*, 12-4 (1988), p. 7.
- 5- Hedley Bull, "Strategic Studies and Its Critics," *World Politics*, 20-4 (1968), pp. 597-601 & p. 605. 냉전시대의 전략연구가 지닌 한계에 대한 헤들리 불의 지적은 이후 배리 부잔과 같은 후속세대의 확대된 안보논의가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는 냉전시대의 전략연구가 지닌 문제점들을 인식할 수만 있어도 새로운 학문적 후속세대가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6- Bernard Brodie, "Strategy as a Science," *World Politics*, 1-4 (1949), p. 475. 브로디는 "전쟁은 장군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클레망소(Clemenceau)의 경구를 인용하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전략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Brodie (1949), p. 467.
- 7- Bull (1968), p. 600. 국제정치이론에서 이러한 합리적 선택의 패러다임이 지닌 한계를 인식한 초기의 저작으로는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참조.
- 8- Barry Buzan, "New Patterns of Global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Affairs*, 67-3 (1991a), pp. 434-438.
- 9- Jessica Tuchman Mathews, "Redefining Security," *Foreign Affairs*, 68-2 (1989), pp. 176-177.
- 10- Pinar Bilgin, "Individual and Societal Dimensions of Securit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5 (2003), p. 204.
- 11- 코펜하겐 학파의 연원에 대해서는 Bill McSweeney, "Identity and Security : Buzan and the Copenhagen School,"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2-1 (1996), pp. 81-93

참조.

- 12\_ Jef Huysmans, "Revisiting Copenhagen : Or, On the Creative Development of a Security Studies Agenda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4-4 (1998), pp. 483-484.
- 13\_ Barry Buzan, *People, States and Fear :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2nd ed. (Boulder : Lynne Rienner Publishers, 1991b), pp. 97-98. 부잔은 대외적 맥락에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얼마나 강함가에 따라서 국가를 '강한 권력(strong powers)' 과 '약한 권력(weak powers)' 으로 부르고 있다. 반면에 국내 정치사회적 응집도의 차이에 따라서는 '강한 국가(strong states)' 와 '약한 국가(weak states)' 로 구분한다. 국가의 대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을 구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처럼 다른 분류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분이 이론적으로 굳이 필요한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 14\_ 브라이언 잡(Brian Job)은 전통적인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 의 개념이 국가 내부의 상황을 안정적인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제3세계권의 안보문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그는 국내적 위협의 관념을 포함하는 '불안 딜레마(insecurity dilemma)'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Brian Job, "The Insecurity Dilemma : National, Regime, and State Securities in the Third World," in Brian Job, ed., *The Insecurity Dilemma : National Security of Third World States*(Boulder : Lynne Rienner, 1992), p. 18. 제3세계권의 안보문제에 대한 또 다른 논의로는 Mohammed Ayoob, "The Third World in the System of States : Acute Schizophrenia or Growing Pai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3(1989), pp. 67-79 ; Mohammed Ayoob, "The Security Problematique of the Third World," *World Politics*, 43-2(1991), pp. 257-283 참조.
- 15\_ 유럽의 평화연구는 평화가 단순한 전쟁의 부재(不在)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라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안보의 관념도 국가 중심의 군사적 측면을 넘어서 개인과 사회집단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고려되어야만 했다. 평화연구의 시각에서는 폭력의 부재라는 소극적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문화적으로 일어나는 간접적 폭력의 제거라는 적극적 측면에서의 안보가 더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이와 같은 평화연구의 새로운 분위기는 냉전시대에 강대국 중심의 이론틀로는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었던 제3세계권의 안보문제를 다루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제3세계권에서는 '위협'이 단지 외부의 군사적 대립으로부터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내부의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 16\_ Emma Rothschild, "What Is Security?" *Daedalus*, 124-3 (1995), pp. 60-66.
- 17\_ Bryan Mabee, "Security Studies and the 'Security State' : Security Provision in Historical Context," *International Relations*, 17-2 (2003), pp. 143-145.
- 18\_ Buzan (1991b), pp. 209-210. 부잔은 안보 콤플렉스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반작용의 동적 메커니즘이 단위체의 속성이 아니라 지역의 구조적 속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과정형성(process formation)' 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 19\_ Barry Buzan, "Rethinking Security after the Cold War," *Cooperation and Conflict*, 32-1 (1997), p. 11.
- 20\_ 호이스만은 이와 같은 코펜하겐 학파의 토착적인 문제의식이 유럽의 경험 속에 '내재된(embedded)' 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Huysmans (1998), p. 499.
- 21\_ Buzan (1991b), pp. 368-374.
- 22\_ Buzan (1991b), p. 19.
- 23\_ Richard H. Ullman, "Redefining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8-1 (1983), pp. 133-134.
- 24\_ Huysmans (1998), p. 487.
- 25\_ 이러한 전통을 대변하는 저술로는 Ken Booth, "Security and Emancip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Relations*, 17-4 (1991), pp. 313-326.
- 26\_ Huysmans (1998), p. 488.
- 27\_ 이러한 안보 다이내믹스는 위협을 받는 안보의 대상뿐만 아니라 안보의 대상을 규정짓는 안보문제화의 행위자(securitizing agents), 그리고 주체는 아니지만 안보 영역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기능적 행위자(functional agents)를 포함한다. Barry Buzan, Ole Waever and Jaap de Wilde, *Security :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Boulder : Lynne Rienner, 1998), p. 35.
- 28\_ David A. Baldwin, "The Concept of Securit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3 (1997), p. 13.
- 29\_ Baldwin (1997), pp. 12-17.
- 30\_ 볼드윈의 제안은 지금까지 군사영역을 최우선시하는 최고가치(prime value) 접근 방식, 그리고 군사영역이 다른 영역과 함께 핵심 가치를 형성한다고 보는 핵심 가치(core value) 접근방식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Baldwin (1997), pp. 18-21.
- 31\_ Buzan *et al.* (1998), p. 26.
- 32\_ 여기에서 '안보문제화(securitization)' 라는 표현은 사회의 제 영역에서 위협요소를 인식하고 그로부터 위기상황을 문제화함으로써 사회의 자원을 집중 동원하여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일컫는다. 코펜하겐 학파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이 표현은 국내에서 ‘안보화’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원래의 용어가 지닌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안보문제화’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33\_ Buzan *et al.*(1998), p. 31.
- 34\_ Buzan(1997), p. 14.
- 35\_ Thierry Balzacq, “The Three Faces of Securitization : Political Agency, Audience and Context,”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1-2(2005), pp. 174-176. 이와 같이 언어의 행위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화행이론은 오랫동안 담화 분석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으며, 컴퓨터 언어의 개발에 응용되기도 했다.
- 36\_ 발자크는 이와 같은 안보담론의 주된 행위자들을 ‘안보주체(referent subject)’라고 표현하고 있다. 원래 코펜하겐 학파에서는 ‘안보대상(referent obje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지만 안보주체에 대해서는 대칭적인 표현 대신에 단지 ‘안보문제화의 행위자(securitization actor)’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Balzacq(2005), p. 194 미주 9 참조.
- 37\_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안보를 하나의 정치적·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한다. 즉 안보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현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관적이거나 상대적인 것도 아니며, 사회적 담론을 통한 합의의 산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이렇게 보면 위기 또는 위협에 대한 사회적 논의라는 정치적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안보담론이 곧 안보 그 자체가 된다. Jef Huysmans, “Defining Social Constructivism in Security Studies : The Normative Dilemma of Writing Security,” *Alternatives*, 27(2002), pp. 42-43.
- 38\_ 호이스만은 안보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된 후 여타 분야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푸코(Foucault)의 개념을 원용하여 ‘안보형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Huysmans(2002), pp. 45-46.
- 39\_ Olav F. Knudsen, “Post-Copenhagen Security Studies : Desecuritizing Securitization,” *Security Dialogue*, 32-3(2001), p. 359.
- 40\_ Buzan *et al.*(1998), pp. 23-24 ; Buzan(1997), p. 14 ; Knudsen(2001), p. 359.
- 41\_ 코펜하겐 학파에서 군사적 차원을 넘어서 ‘확대(expanded) 안보’ 및 ‘심층(deepened) 안보’의 관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바로 개인이 아닌 집단을 중요한 분석 수준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군사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환경, 경제, 사회 등 비군사영역들을 포함하는 ‘안보렌즈(lenses of security)’의 관념은 이러한 집단 중심의 시각을 잘 대변하고 있는 표현이다. Buzan *et al.*(1998), p. 21.

- 42\_ 빌 맥스위니(Bill McSweeney)에 따르면, 코펜하겐 학파는 안보관계에 있어 '정체성(identity)'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사회가 하나의 통합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이론 중에서도 '사회안보(social security)'의 개념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Bill McSweeney, *Security, Identity, and Interests : A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72.
- 43\_ Michael Williams, "Words, Images, Enemies : Securitization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7(2003), pp. 515-518.
- 44\_ Eriksson (1999), p. 318.
- 45\_ 비판이론의 안보논의를 정리한 논문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Keith Krause, "Critical Theory and Security Studies : The Research Programme of 'Critical Security Studies'," *Cooperation and Conflict*, 33-3(1998), pp. 298-333 ; Keith Krause and Michael C. Williams, "Broadening the Agenda of Security Studies : Politics and Methods,"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40(1996), pp. 229-254.
- 46\_ Buzan(1997), pp. 19-20.
- 47\_ Buzan(1991b), pp. 178-181.
- 48\_ Huysmans(2002), p. 42.
- 49\_ 사회적 구성주의가 안고 있는 규범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었던 '진동전략(oscillating strategy)'에 대해 호이스만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원래 모니카 덴 보어(Monica den Boer)에 의해 제시된 이 전략은 특정한 담론이 사회 내에서 만들어내는 수행적 영향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현실 왜곡이 있었는가를 가려내는 비판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으로써 안보담론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왜곡현상을 바로잡고 궁극적으로 현실을 올바르게 대변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렇지만 호이스만은 이러한 진동전략이 객관적인 역사 또는 왜곡이 없는 현실이 가능하다는 불합리한 전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Huysmans(2002), pp. 47-48.
- 50\_ 호이스만은 사회적 구성주의가 안고 있는 규범적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담론 형성의 구조적 작업에 대한 '이론화(theorization)'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화는 바로 언어가 지닌 '수행적' 작업을 파악하고, 사회적 과정 속에 내재된 언어의 보편적 측면을 이해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현대 세계에서 안보담론과 언어가 어떻게 사회관계를 형성해 왔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징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권력과 지식이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드러냄으로써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겨져 왔던 권력관계를 비

판적으로 재평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이스만은 규범적 딜레마에 대한 완벽한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는다. 유일한 방안은 이와 같은 ‘이론화’의 방법을 통해 규범적 딜레마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Huysmans (2002), pp. 49-53.

- 51\_ Buzan (1991b), p. 14.
- 52\_ 또한 ECC는 치열한 논쟁을 통해 부각되지만 지금까지의 안보논의들은 대부분 이러한 수준에는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볼드윈의 주장이다. Baldwin (1997), pp. 10-11.
- 53\_ Buzan (1997), p. 21.
- 54\_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부쓰의 ‘유토피아적 현실주의’ 접근방식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에 따르면 유토피아의 관념은 현실의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현실을 넘어서는 보다 나은 모습을 구현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현실 속에서 행동을 유발시키는 촉매역할을 한다고 본다. 말하자면 더 나은 상태를 위한 욕망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유토피아인 것이다. 권력의 요소만을 강조하면서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는 도덕이나 유토피아적 요소를 등한시하는 ‘비현실적 현실주의 (unreal kind of realism)’를 비판했던 카(E. H. Carr) 역시 자신과 같은 유토피아적 현실주의자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Ken Booth, “Security in Anarchy : Utopian Re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Affairs*, 67-3 (1991), pp. 535-536.
- 55\_ Helga Haftendorn, “The Security Puzzle : Theory-Building and Discipline-Building in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5 (1991), pp. 5-7 & p. 15.
- 56\_ Johan Eriksson, “Observers or Advocates? On the Political Role of Security Analysts,” *Cooperation and Conflict*, 34-3 (1999), p. 314.
- 57\_ Knudsen (2001), p. 360.
- 58\_ Melvyn P. Leffler, “National Security,”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7-1 (1990), p. 151.
- 59\_ Farrell (2002), pp. 65-69.
- 60\_ Buzan (1997), pp. 20-21.
- 61\_ Theo Farrell, “Constructivist Security Studies : Portrait of a Research Program,”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4-1 (2002), p. 70. 예를 들어 스티븐 월트(Stephen Walt)의 ‘위협 균형(balance of threat)’은 주관적인 요소가 현실주의 이론에 반영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Stephen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구성주의 입장에서 권력의 변수를 고려하고 있는 연구로는 Jeffrey T. Checkel,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Politics : Bridging the Rationalist-Constructivist Divid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3-4 (1997), pp. 473-

- 495 ; Martha Finnemore, "Norms, Culture, and World Politics : Insights from Sociology's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50-2(1996), pp. 325-347.
- 62\_ Alexander Wendt,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20-1 (1995), p. 75. 구성주의의 인식론이 실증주의에 가깝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Jeffrey T. Checkel, "The Constructivist Tur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orld Politics*, 50-2(1998), pp. 324-348 ; Ted Hopf, "The Promise of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23-1(1998), pp. 171-200 참조.
- 63\_ 구성주의가 비판이론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방법론과 인식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데, 구성주의 학자들은 대부분 '정상과학(normal science)'의 범주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론과 대비된다. Hopf(1998), p. 182. 구성주의 관점에서 안보문제를 논하면서 주류의 과학적 방법론을 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64\_ Williams (2003), pp. 524-526.
- 65\_ Balzacq (2005), pp. 172-174.
- 66\_ Buzan (1991b), p. 328.
- 67\_ Lene Hansen, "The Little Mermaid's Silent Security Dilemma and the Absence of Gender in the Copenhagen School," *Millennium*, 29-2(2000), p. 290.
- 68\_ 네트워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들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가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학제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트워크 과학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로는 Albert-Lászlo Barabási, *Linked : The New Science of Networks*, 강병남 · 김기훈 옮김, 『링크 :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서울 : 동아사이아, 2002) ; Duncan J. Watts, *Six Degrees : The Science of a Connected Age*, 강수정 옮김, *Small World*(서울 : 세종연구원, 2004) ; Mark Buchanan, *Nexus : Small Worlds and the Groundbreaking Theory of Networks*, 강수정 옮김,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서울 : 세종연구원, 2003).
- 69\_ McSweeney(1999) 참조.
- 70\_ Martin Shaw, "There Is No Such Thing as Society : Beyond Individualism and Statism in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9(1993), pp. 159-175.
- 71\_ 안보 및 전쟁연구에 네트워크 시각을 도입한 최근의 연구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

- 들을 들 수 있다 : Richard Matthew and George Shambaugh, "The Limits of Terrorism : A Network Perspectiv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7 (2005), pp. 167-627 ; John Arquilla and David Ronfeldt, *The Advent of Netwar*(CA : RAND, 1996) ; John Arquilla and David Ronfeldt, eds., *Networks and Netwars : The Future of Terror, Crime, and Militancy*(CA : RAND, 2001).
- 72\_ 안보 딜레마의 개념에 대해서는 John H. Herz, "Idealist Internationalism and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2-2(1950), pp. 157-180 ; Robert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1978), pp. 167-214 참조.
- 73\_ 분리재(divisible goods)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 그 이익을 나누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협력을 달성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이를 배분하기 위한 위계적 거버넌스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사유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매겨져 거래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분리재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화가 고도로 비분리적(nondivisible) 속성을 지닌 경우에는 그 이익을 분배하는 데 많은 거래비용이 소모되므로 구성원들 사이에 협력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적인 협력만으로도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제한된 지역 내에서만 안보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이것이 외부의 행위자에게는 오히려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재화가 비분리적일 경우에는 시스템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많은 경우에 구성원들은 무임승차(free-riding)를 하려는 성향을 보이며, 시스템은 혼란에 빠져들면서 음(陰)의 총량(negative-sum)상태가 되고, 결국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권위주의적 체도를 만들어내게 된다. Philip G. Cerny, "The New Security Dilemma : Divisibility, Defection and Disorder in the Global Er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6(2000), pp. 626-627.
- 74\_ 쉰이는 21세기에 들어와 가속화되고 있는 재화의 분리성이 경제적 세계화, 이데올로기의 종언, 다문화주의와 탈근대주의, 그리고 초국가적 거버넌스라는 네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Cerny(2000), pp. 633-642.
- 75\_ 이에 대해서는 Albert O. Hirschman, "Exit, Voice, and the State," *World Politics*, 31-1(1978), pp. 90-107 참조.
- 76\_ 이러한 과정 속에서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바로 '지역'이 세계정치의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점에서 가장 앞선 형태의 지역정치 단위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어 집단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통합되고 일관성 있는 지역 '공간'을 창출해낸다는 점에서 신안보 딜레마의 새로운 기반이 되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 도시들의 성장 역시 노동과정의 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부각되는 공간적 허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위



체들의 변화는 다중적이고도 중첩된 형태의 정체성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국가에만 안주할 수 없었던 많은 개인과 집단에게 공간적 '적합지(niche)'를 대안으로 제공함으로써 세계정치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Cerny(2000), pp. 643-645.

- 77\_ 위험사회에 관한 울리히 벡의 논의로는 Ulrich Beck, *Risk Society : Towards a New Modernity*(London : Sage, 1992); "The Cosmopolitan Society and Its Enemies," *Theory, Culture and Society*, 19-1 · 2(2002), pp. 17-44 ; "The Terrorist Threat : World Risk Society Revisited," *Theory, Culture and Society* 19-4(2002), pp. 39-55 참조.
- 78\_ 위험사회론의 관점에서 안보를 다룰 경우 구성주의 시각의 고질적인 문제인 배타적 인종중심주의(ethnocentrism)에 빠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호이스만의 주장이다. Huysmans(1998), p. 501.
- 79\_ Baldwin(1997), p. 23.



## Abstract

### Concept of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Period : The Copenhagen School, Securitization, and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Min Byoung W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Discourses on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period has been dominated by the Copenhagen School which emphasizes the conceptual extension of security. This paper looks at how the concept has changed in the period focusing on the diversification of security targets and the expansion of security sectors. The concept of securitization will be discussed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This paper will stress that the bottom lines of this extensive concept of security are the new perception of threats and social construction of its conceptualization. Theoretical assumptions and debatable issues of the extended concept of security are also to be discussed in detail. Normative aspects, positivistic and epistemological arguments, and ontological issues regarding the new trend of global networks are specific topics here, followed by the issues of the new security dilemma and the risk society. As such, the paper will evaluat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ecurity discourse of the Copenhagen School in this new period.

**Keywords :** Security, Conceptual Extension, Copenhagen School, Securitiz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